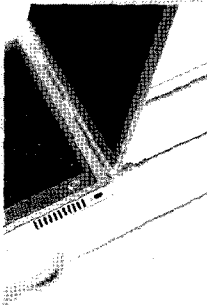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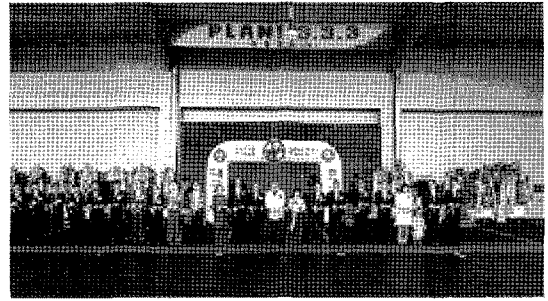


## — 조합 · 업계소식



- 대영포장(주)대구공장 준공
- KOREA PACK 2011(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안내
- 권혁홍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임
-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실효성에 의문
- 中企적합업종 선정 4대 가이드라인 제시
- 중소기업 91%,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부담
- 쇼핑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선정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할 것
- 2011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교육 참가 안내

## 대영포장(주)대구공장 준공



대영포장(주)(대표이사 권혁홍, 권영) 대구공장이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공장에서 2011. 4. 7(목)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된 대영포장(주)대구공장은 부지면적 10,000평에 골판지생산 설비로 미쓰비시 코르크레이터 2,500쪽(분당 350미터) 플세트로 월간 최대 1,400만스퀘어미터 생산능력을 갖추고, 미쓰비시 에볼 골판지상자제조설비를 갖춘 최첨단 설비를 장착하였다.

대영포장은 이로써 경기도 안산 본사를 포함하여 발안, 성서, 달성 공장과 함께 5개현지공장 체제를 구축하였다.

## KOREA PACK 2011(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안내



제16회를 맞이하는 'KOREA PACK 2011' 전시회가 2011. 6.14~17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600여개사가 참가하며, 32,000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4대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전시회이다.

또한, 골판지포장조합은 월간포장, (주)경영전략의 공동 개최를 통해 '골판지포장산업 특별전시관'을 만들어 골판지포장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골판지포장산업 특별전시관'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합을 통해 참가할 경우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골판지포장조합으로 문의(Tel. 02-3474-7124~8)하기 바랍니다.

## 권혁홍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임



지난 2011. 2. 28(월)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제 49회 정기총회에서 신대양제지(주)대표 이사인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제 24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권 이사장은 제지조합 이사장을 지난 2월 연임한데 이어, 향후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실효성에 의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악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및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교섭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느정도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일부에서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응한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하는데 단순히 협동조합에 신청권만을 부여하고 협상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요 대기업이 인상된 원자재가격 반영을 미루어 중소기업 단체가 단체협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실제적인 협상은 당해 하도급업체와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거래처 변경 및 재입찰 등을 시도하여 하도급업체를 견제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그때 가서 실효성을 판단하여 협상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실현되지 못한 제도를 2년뒤에 기약한다는 것도 허무한 얘기라는 지적이 있다.

## 중소적합업종 선정 4대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2011. 4. 22(금)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조업분야) 선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안)”의 주제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4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시장 규모가 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사이인 품목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나머지 세부기준에 따라 적합업종으로의 선정 여부가 최종 가려진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정안은 오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5월부터 중소기업계 신청을 받아 올 9월 해당 업종과 품목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으로는 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를 고려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최소효율규모, 생산성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적합성이 우선 꼽혔다. 또 소비자만족도, 협력사피해, 수입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등의 부정적 효과 방지와 R&D비율, 경쟁력수준 등 중소기업경쟁력도 감안됐다.

우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단계로 중소기업 수 및 시장규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품생산 중소기업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이나 시장규모가 1천억 미만 또는 1조5천억 초과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1단계를 통과한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가이드라인 적합성을 따지게 되며 상시근로자수 기준 최소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등 중소기업 적합성 부분의 가중치가 가장 많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 ·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 대기업 사업이양 적용 기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적용대상 대기업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기준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로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의 경우 직접생산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과 직접생산만 제한하고 OEM은 허용하는 방안이 기준으로 나왔다. 수출을 위한 생산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수용 및 수출용 생산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과 수출용 생산에 대해서는 사업 제한 범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와 경쟁력 등을 분석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최대 6년간 보호를 받은 이후 졸업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무엇이 쟁점인가

- 가이드라인 선정과 관련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용 중소기업 범위 및 시장 규모 등.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은 시장경제원칙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임성호 백천 세척기 대표는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대기업들은 경쟁만이 기업을 제대로 성장시킨다고 주장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의 대표로 참가한 임 대표는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은 경쟁은 없고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각종 특혜의 산물”이라며 “이제와서 시장경제 원칙 운영하는 것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태도며 독점적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반시장친화적 제도로 고유업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유업종제도 부활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 독점이 경쟁력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경영목표, R&D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히려 경쟁력 향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적합업종 제외와 관련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시장규모 5백억원 미만 3조원 초과로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조 본부장은 “현행 시장규모 1천억 미만 1조5천억 초과 기준의 경우 관련통계상 출하액이 1천억원을 못넘는 품목이 전체 2,112개 품목 중 40.5%이며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시장규모가 4~5조원 수준으로 오히려 상한기준을 넘어 적합업종 품목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 된다”고 지적했다.

#### 중소적합업종 왜 선정되나

-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 중소기업 91%,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부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의 91.3%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2.3%가 지난해 3월 대비 원자재 가격이 평균 25.9%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부라도 반영한 기업은 37.4%(일부반영 26.8%+ 모두반영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 9.29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후, 최근 하도급법이 개정(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3.11) 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납품시(175개사),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4%(일부반영 29.7%+ 모두반영 5.7%)로 일반 중소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감소 우려”(51.1%), “판매(납품)처의 가격인상 거부”(42.9%)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나,

○ 반면, 대기업납품기업은 “판매(납품)처의 가격인상 거부”(55.6%) 응답비율이 “가격경쟁력약화 우려”(38.4%) 응답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91.3%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

○ 중소기업의 91.3%는 현재 원자재 가격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매우 부담” 응답비율이 72.0%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의 자체 대응방안으로는, “원가절감”(45.5%)과 “제품가격인상”(34.8%)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판로확대”(19.8%), “원자재 구매 거래처 다변화”(17.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으로는, “원자재 구매 관련 자금지원확대”(3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원자재 회사 설립”(16.5%), “비축물량확대”(16.0%), “투기세력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시 애로

○ 대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공급하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119개사) 중, 2곳중 1곳(48.7%)은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규모 변경으로 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 구매를 하는 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52.9%)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구매대금의 현금지급 의무화”(14.3%), “대기업의 담합 및 매점매석으로 높은 원자재가격 수준 지속”(11.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쇼핑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선정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가칭 주식회사 쇼핑원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지난 2월 16일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사업자로서 단독 신청한 쇼핑원은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공공적 성격의 단체와 기관이 전체지분의 78%를 구성하여 사실상 지분매각을 방지함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성격도 갖추었다. 골판지포장조합도 이사회를 소집하여 5천만원을 지분참여기로 결의하고 지난 4월 7일자로 납입을 완료하였다.

○ 쇼핑원은 중소기업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향후 전체 채널 편성의 8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 서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상품군인 가정용품, 패션의류, 농수축산 상품군 등을 주력 제품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특히, 기존 홈쇼핑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홈쇼핑방송 제작지원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 안정화와 잔여 재고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직매입제를 적극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마케팅과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익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 쇼핑원은 또한 조기 경영 안정화를 통해 구현된 수익을 중소기업상품의 타 유통채널 연계판매 강화, 중소기업상품 해외수출 지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상생펀드 조성 및 운영, 중소기업 신용통지원 개발원 설립 운영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환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 금번 도입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에 거는 중소기업계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간 유통시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온 두원물산 신홍균 상무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해 기존 홈쇼핑사들의 중소기업과의 합리적 거래관행이 조기에 정착되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의 판로 문제가 적극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익성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일정이 당초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하반기쯤 첫 전파를 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달 중에 상습 범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5번째 개최된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 나설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정밀금형센터를 설립하고 올해는 LG전자가 평택에 금형기술센터를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의 금형 경쟁력을 무더기로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이같은 스카우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적격조합 인증요건상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되어 있어 조합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75%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준 한국교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울산에서 대기업 3개 대리점이 지역 4개 학교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협의해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중소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교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40%가 넘는데다 매장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까지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 속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절차 마련을 비롯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방지책 마련 △협동조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동화사업 허용 △공공기관 발주공사 공사용자재 하도급가격 하한률 규정 등 15건을 건의했다.

## 2011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교육 참가 안내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비 전액 지원은 물론 일부과정(기술관련 과정)의 경우 참가 교육생의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골판지포장 업계 임직원의 직무능력향상에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비즈니스 기획과 보고서 작성 실무 마스터 과정」등 7개 우수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전 과정 3일, 21시간, 10차수 운영)

- 비즈니스 기획과 보고서 작성 실무 마스터 과정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실무 마스터 과정
- 우리제품 제값 받는 협상스킬 마스터 과정
- 성과창출 전략적 고객관리 마케팅 과정
-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마스터 과정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무회계 역량 향상 과정
- 생산품질 문제해결 Speed-up 실습과정 - 인건비 지원대상 과정

나. 교육 실시계획

- 교육기간 : 3. 9일 ~ 10월말(8개월간)
- 교육횟수 : 7개 과정 총 70차수(각 과정당 10차수 운영)
- 교육장소 : 전국 12개 지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제주 등)

다. 교육참가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라. 문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www.sbhrdc.re.kr)홈페이지, 교육기획부 031-320-0187